

OECD APM 회의 출장 결과보고

1. 회의 개요

☐ 기간 및 장소

- 2007. 11. 3(토)~11. 8(목), 프랑스 파리 (OECD본부)

☐ 회의 일정

- 제44차 APM (농업정책·시장작업반) 회의 (11. 5~7)
- 회의 참석자: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송주호(농림부에서 출장 비용 부담)
 - 기타 참석자: 농림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이선복, 구조정책과 송남근 사무관, 농어촌공사 조 박사, OECD대표부 윤동진 농무관

☐ 주요 의제

- 2007한국농정평가 보고서 : 사무국 초안에 대한 우리측의 의견 개진 및 회원국들의 질의에 대한 대응 ('08.2월 확정)
- 농업정책·시장작업반(APM) : 바이오에너지 지원정책, 농업생산자지지지추정치(PSE) 및 관련지표, 농촌개발정책 등 20개 의제 논의

2. 주요의제 논의 결과

가. 한국농정평가보고서 논의 결과 (11.7,농업정책시장작업반)

- 98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OECD 한국농정평가보고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농업정책이 OECD의 권고사항과 원칙에 따라 시장지향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
- 향후 지속적인 농정개혁을 위해 논농업직불제, 농지제도, 우유보조금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12개 사항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.
- 이에 대해 우리측은 OECD 사무국의 한국농정평가보고서를 환영하면서 OECD의 구체적인 정책권고사항에 대해 OECD사무국의 시각과 한국의 농업 현실과 정책 여건에서 보는 시각 차이 설명
- 미국(쌀공공비축제, 한우육성시책), EU(농업지원의 타겟팅), 호주(농산물교역확대), 프랑스(우유지원정책), 캐나다(도농간 소득격차), 뉴질랜드(농업서비스 확대), 스페인(작물재해보험) 등 자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.
- 본 보고서는 '08.2월 차기 농업정책시장작업반회의에서 공개결정될 예정이며, 우리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 제출기로 하였음.

나. 농업정책시장작업반 임무조항(Mandate) 논의

- 동작업반 회의를 종전의 5월, 11월 연간 2회 개최되는 회의에 2월회의를 추가하여 연간 3회 개최하기로 합의

- 매년 작성되는 AGLink와 Outlook업무는 종전과 같이 동위원회에 존치하기로 합의하고, 내부적으로 다른 위원회나 작업반 등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함.
- 금번회의에서 합의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1월말 개최되는 농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될 예정임

다. 농업지지추정치(PSE) 개선작업 논의

- 농업지지추정치(PSE) 개선을 위한 전문가그룹회의 권고사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PSE 새로운 분류방식으로 제기된 Option1과 2에 대해 아직 회원국의 합의는 없었음.
 - 차기 전문가회의에 회부하기로 한다는 건의사항을 '08.2월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음.
- 또한 농업지지의 질적인 면을 측정하기 위해 사무국이 고안한 생산자유연성지수(PFI)는 회원국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기각되었으며 필요시 전문가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처리
- 농업용수의 PSE 포함문제는 1차보고서의 Annex에 포함되어 있는 각국의 자료는 금년도 12.31까지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합의
 - 사무국이 준비하고 있는 Guideline은 '08.5월까지 준비하여 작업반회의에 제안할 예정
 - 농업용수에 관한 추가적 논의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내년도 3-4월중 개최할 예정임.

3. 시사점

-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OECD의 한국농정평가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농정이 UR이후 농산물 무역개방화시대와 21세기 변화된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농업정책에 대해 평가
 - 국제적인 농업정책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평가해 본 자료로서 이를 개선해나가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됨.

- OECD 평가보고서에 따르면, 우리나라는 특히 2005년 쌀재협상을 이후 논농업직불제 도입, 쌀수매제도의 폐지, 공공비축제 도입 등 보다 시장지향적이고 저비용적인 새로운 식량안보정책 시도
 - 농업생산, 가공 및 유통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몇 차례의 농정종합대책 시도, 친환경농업 증진정책 시행
 - 2002년 농지소유상한규정 철폐 · 2005년도 농지은행제도 도입 등 농지이용 및 소유에 관한 제도의 시장지향적인 개정
 - 2004년도 쌀재협상과 몇가지 FTAs협상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조치 시행
 -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정부는 OECD농업장관이 제시한 원칙에 의거 광범위한 농업정책 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.

- 한국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이행이후 국제경쟁에 크게 노출되면서 경쟁 증가로 적절한 조정정책이 시급한

목표로 대두

- 소규모 농가의 수가 많고 노령농민의 비중 증가, 농촌 및 도시가구 간의 소득격차가 아직 높은 점
 -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소비욕구 변화
 - 아직도 다른 경제 부문에 비해 부진한 농식품 부문과 관련 유통시스템, 낙후된 농촌지역의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 지적
 - 논농업직불금 제도, 초과분 우유에 대한 보조금 지원, 농지소유제도 등 계속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정책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.
-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정책이슈들이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과의 정책적인 격차가 많이 축소
- 최근 농업정책시장작업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한 경제분석, 농업지지추정치 측정방식 및 관련지수 개발, 농업농촌개발정책 등
 - 가까운 장래에 국내적으로도 본격적인 정책수요로 대두될 것을 감안하여 정책부서와 관련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체계 확립을 통해 철저한 대응이 절실한 것으로 평가됨.

4. OECD-KREI 공동 세미나 실시 문제 협의

- 이번 한국농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한국에서 OECD-KREI 공동 세미나를 여는 내용을 다시 협의하였음

- OECD 측에서는 이번 한국농정보고서가 공개승인되어야 한국에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하며, 내년 2월 APM 회의에서 공개승인이 되면 4월에 한국에서 공동 세미나 개최가 가능하다고 함.
- 그러나 문제는 이번 보고서에서 PEM 한국 모델이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preliminary 결과가 발표되었으며, 12월중순까지 개발이 되어야 2월에 한국농정 보고서가 승인될 수 있는데 그 여부는 12월 초에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함.
- 따라서 12월 초까지 일단 기다려 보고, 그때까지 결정이 안되면 6월경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.